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7. 2.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 14건)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1(p)
2.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정유라 부정 입학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1(p)
3. 부산 엘시티사건 수사를 철저히 할 것----- 1(p)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재원 부담비율을 확대할 것-----1(p)
5. 일반직 검찰수사관 승진시험을 개선하고, 특별승진 제도를 확대하며, 검사보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1(p)
6. 기결수 변호인 접견제도 남용 문제를 개선 조치할 것-----2(p)
7.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검토할 것-----3(p)
8. 검찰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 파견제도를 재검토 할 것-----4(p)
9. 법무부의 검사 수 정원 이외의 ‘비공식 파견검사’를 검찰로 복직시킬 것-----4(p)
10. 거창구치소의 현 예정부지 건립을 재고하고 외곽으로 이전 할 것-----4(p)
11.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소년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할 것 -----4(p)
1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소송대리 가능 인원의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5(p)
13. 난민 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5(p)
14.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예산 확보 방안 및 원장 충원 계획 등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6(p)

(대검찰청 : 7건)

1. 대형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신속하게 수사할 것-----6(p)
2. 현직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인원을 최소화할 것
-----6(p)
3.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7(p)
4. 청사관리용역원 계약 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법무부와 협조하여 청사관리용역 계약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7(p)
5. 주식거래금지를 적용받는 특정부서 근무자의 실제 주식계좌
개폐 여부를 확인할 것-----7(p)
6.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 등의 재산등록 내역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
할 것-----8(p)
7. 검사 적격심사 시에 무죄평정 자료를 반영하여 심사할 것
-----8(p)

(서울고등검찰청 : 13건)

1. 재정·조세범죄 단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므로 확대 실시할 것
-----8(p)
2. 검사 개인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감찰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해 감찰부 배속 검사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8(p)
3. 대기업수사와 관련하여 먼지털이식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필요한 범위만 수사할 것-----9(p)
4.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9(p)
5. 고등검찰청의 인력을 일선 지검에 보내 수사인력으로 활용할 것
-----9(p)
6. 검찰내부 비리 및 권력형 비리 근절 등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하여 전향적 태도로 검토할 것
-----10(p)

7.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치아발치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것-----10(p)
8.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모금 등과 관련한 청와대 및 비선 개입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11(p)
9. 최경환의원 취업청탁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11(p)
10. 선거법 위반사건은 공소시효가 짧으므로 신속히 수사할 것-----11(p)
11. 중앙지검의 높은 미제율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11(p)
12. 무죄사건 감소를 위해 수사팀 외에 사건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별도의 검토팀을 두는 방안을 강구할 것-----12(p)
13. 국외 도피사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12(p)

(대전고등검찰청 : 8건)

1.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13(p)
2.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에 특허 침해범죄 전담수사부 신설을 검토할 것-----13(p)
3.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것----- 14(p)
4. 갑을오토텍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할 것-----15(p)
5. 유성기업 고소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15(p)
6. 아이카이스트 및 아이팩토리에 대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할 것-----15(p)
7. 검사 직접 청구 영장기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16(p)
8. 대전지검·청주지검의 높은 형사사건 무죄율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17(p)

(광주고등검찰청 : 9건)

1.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18(p)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법정주의에 가깝게 운용되는
것을 재검토할 것----- 18(p)
3. 스폰서검사 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마련할 것----- 18(p)
4. 피의자와 변호인이 작성되는 조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듀얼모니터 설치를 검토할 것-----18(p)
5.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것
----- 18(p)
6. 국가보안법 미제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19(p)
7.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결정 과정에서 검찰이 항고이유서에
첨부한 개를 이용한 감정서의 적합성 여부와 동물보호법상
절차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19(p)
8. 검사 직접 청구 영장기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20(p)
9.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많은 사회적 문제와 우려를 야기하므로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외국례를 참고하여 범죄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p)

(대구고등검찰청 : 2건)

1. 대구광역시립 희망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할 것-----21(p)
2.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학교급식 관련 사건을 강력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 21(p)

(부산고등검찰청 : 10건)

1.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
-----21(p)

2.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심야조사를 줄일 것-----22(p)
3. 형사부 검사 인력 확충 등 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할 것
-----23(p)
4. 재소자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25(p)
5. 국외출국에 따른 기소중지자가 늘어나고 있음. 적극적인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을 추적·검거할 것-----25(p)
6.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26(p)
7.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26(p)
8.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27(p)
9. 지역토착 비리 사건의 발본색원에 노력할 것-----28(p)
10.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학교급식 관련 사건을 강력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29(p)
11.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의 최
측근 등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과 관련
홍준표 도지사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30(p)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 지적취지에 유념하여 수사하겠음
	2.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 검찰은 최순실 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총 11명을 기소(7명 구속 기소)하였고, 현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부산 엘시티사건 수사를 철저히 할 것	○ 부산동부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6. 10. 21. 부산지검에 이송 후, 수사팀을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 - 현재까지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 총 12명을 기소(11명 구속기소)하였음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재원 부담 비율을 확대할 것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낮은 정부지원 비율을 감안하여, '17년 예산 편성시에는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11억원(58.3% 증)의 예산을 추가 지원함 ○ 향후에도 범피센터의 재정현황 및 업무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원 부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5. 일반직 검찰수사관 승진시험을 개선하고, 특별승진제도를 확대하며, 검사보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승진시험 개선) '16. 10. 검찰직 5급 승진시험 과목과 시험방식 개선 - 송치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실무기록 시험을 도입, 수험부담을 경감하고 실무와의 연계성 대폭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p>※ (객관식) 1차 헌법·형사소송법, 2차 형법 + (주관식) 실기시험</p> <p>- 앞으로도 이번에 도입된 제도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여, 실무와 평가 사이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아갈 예정임</p> <p>○ (특별승진제도 확대) 2007년 특별승진제도 도입 이후, 특별승진 비율을 10% 내외에서 30% 내외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15년 25명, '16년 23명), '17년도에도 25명 선발 예정임</p> <p>○ (검사보제도 도입) 검사보제도는 검사 신규 채용 이전에 그 능력과 인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사와 같은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p> <p>- 검사보 제도 도입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음</p>
	6. 기결수 변호인접견 제도 남용 문제를 개선 조치할 것	<p>○ 변호인접견 남용 제한입법 추진</p> <p>- 소송수행이 아닌 심부름이나 회사 경영대리, 외부와의 연락 등 수사나 재판준비와 무관한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2. 입법예고 · '17. 5. 법제처 심사의뢰 · '17. 6. 국무회의 · '17. 8. 국회제출 ※ 변호인 접견남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6.12.7. 의안번호 제2004179호)을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음
	7.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2014년에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특별검사·특별감찰관을 도입하고 별도의 특검까지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의 공수처 설립은 예산이 낭비되고 인권침해적인 사찰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소추 기관의 신설은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봄 ○ 기존 기관의 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새로운 기관을 창설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검찰이 더욱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8. 검찰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 파견제도를 재검토 할 것	○ 현 정부 들어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상당 수 감축하였고, ○ 정부 내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외부 기관 파견을 최대한 자제하여 감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에도 외부 파견기관에 대한 업무내용 및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검사 파견 유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9. 법무부의 검사 수 정원 이외의 ‘비공식 파견 검사’ 를 검찰로 복직 시킬 것	○ 지적하신 취지를 유념하여, 법무부 근무 검사의 업무 소요를 수시로 점검하여 계속 근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복귀시키고 신규 파견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10. 거창구치소의 현 예정 부지 건립을 재고하고 외곽으로 이전할 것	○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2017년 2월 중 거창군에서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한 현장실사 및 구치소 입지의 적정성 분석 등 실시 예정
	11.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소년 교정 시설 정신과 전문의를 확보할 것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방안」 마련(정책기획단, '16.11.) ○ 단계별·시기별 추진과제 이행 - 의무관 인력풀 관리 - 의무관 수시채용 확대 - 의료정보사이트 채용 홍보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활성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사·일반의 적극 채용 등 ○ 전국 11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중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관은 4개 기관임 - 정신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음
	<p>1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소송대리 가능 인원의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대한변호사협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소송대리 가능한 2·3년차 공익법무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법률구조 수요 증가와 고품질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 정원 확대 및 예산 지원에 대한 협의를 기재부와 계속 진행할 예정임 - '17. 2. 변호사 6명 신규 채용 예정
	<p>13. 난민심사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함 <li style="padding-left: 20px;">※ '12년 1,143명에서 '16년 7,542명으로 660% 증가 ○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난민심사 전담 인력 증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li style="padding-left: 20px;">※ '16. 5월 4명 증원, '17. 8월 10명 증원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예산 확보 방안 및 원장 충원 계획 등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 9.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신입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원의 조직과 인사, 성과평가 등 조직운영시스템을 국책연구기관에 준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또한 지정기부금 및 수탁연구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대검찰청	1. 대형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이 신속하게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2명을 구속기소, 515명을 불구속기소, 10,369명을 약식 기소하였음 ○ 앞으로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현직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인원을 최소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법무부 겸임 및 외부기관 파견은, 검사의 풍부한 법률지식을 정부와 공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음 ○ 현 정부 들어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의 적정 규모를 점검하여, 상당수를 감축한 바 있고, 이후에도 신규 파견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상반기 법무부 비공식 파견 검사 4명 축소 후 유지, 2013. 2.~8. 외부기관 파견 검사 17명 감축 - 2016. 8. 외부기관 파견 검사 68명으로 2013. 2. 71명 대비 3명 감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외부기관의 파견희망 수요 등 파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가 파견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하겠음
	3.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도피 범죄자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전출국금지 등 조치를 통해 국외도피를 예방하도록 하겠음 ○ 중요 국외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대검 국제협력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음
	4. 청사관리용역원 계약 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법무부와 협조하여 청사관리용역 계약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에서는 계약 시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중 노임단가 적용 부족예산을 법무부와 협의하여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검찰청 내 계약 상황을 파악, 예산확보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음
	5. 주식거래금지를 적용 받는 특정부서 근무자의 실제 주식계좌 개폐 여부를 확인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2016. 9. 19.)하고, 주식거래금지 적용 대상자 496명에게 지침 시행 및 점검 계획 등을 개별통보(2016. 11.)하였음 ○ 2016. 11.~12.의 주식과다 보유자 및 비상장 주식 보유자 등을 상대로 주식거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2017년도에도 재산등록 심사 내역과 연계하여 주식거래금지 대상자들의 주식 거래 여부를 상시 확인하겠음
	6.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 등의 재산등록 내역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	○ 승진 대상자들이 재산 등록내역을 제출하는 지침을 마련, 재산내역을 제공받아 심사하는 등 자체 재산 심사를 강화하였음 ○ 인사혁신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 중으로, 검찰에서도 재산등록내역 제공에 관한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7. 검사 적격심사 시에 무죄평정 자료를 반영하여 심사할 것	○ 무죄평정 결과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검사 적격심사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 재정·조세범죄 단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하므로 확대 실시할 것	○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세포탈 등 재정·조세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통해 예산누수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서울북부지검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 수사팀」, 서울서부지검은 「자료상 단속 중점검찰청」 운영 중 ○ 향후, 중요 재정·조세 범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단계부터 사전 협의하고 법에 따른 압수수색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휘하는 등 유관기관 공조도 강화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2. 검사 개인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감찰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해 감찰부 배속 검사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서울고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2.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여 현장감찰을 통한 비위 적발과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복무감사 및 공직기강을 점검 중임 ○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종 인사·업무, 복무점검 자료 등을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여 선발하였음 ○ 향후에도, 엄격한 검증을 거친 감찰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충실한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음
	3. 대기업수사와 관련하여 먼지털이식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필요한 범위만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수사에 있어서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겠음
	4.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각 청 자체적으로도 ‘월 2회 시민 위원회 개최’, ‘원칙적 회부 대상 사건 지정’ 등 다양한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운영 중에 있음 ○ 향후, 검찰시민위원회 회부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사건 처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
	5. 고등검찰청의 인력을 일선 지검에 보내 수사 인력으로 활용할 것 (서울고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륜과 실력을 갖춘 고검의 검사 21명이 서울중앙·수원·인천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파견 근무 등을 통해 사안이 복잡하여 처리가 어려운 사건을 충실히 수사함으로써,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1.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설치·운영 - 2015. 2. 인천지검,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설치·운영 ○ 향후 일선 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운영성과 및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6. 검찰내부 비리 및 권력형 비리 근절 등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에 대하여 전향적 태도로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함 ○ 현재,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도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므로 우선은 그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수사·소추기관의 신설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특정 신분자를 대상으로 기소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추기관을 설치한 나라가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7.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치아발치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것 (서울중앙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이후에도 종전 사건의 고소인들이 동일 피의자를 상대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8. 마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모금 등과 관련한 청와대 및 비선 개입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서울중앙지검)	○ 검찰은 최순실 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총 11명을 기소(7명 구속 기소)하였고, 현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9. 최경환 의원 취업청탁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수원지검)	○ '16. 9.경부터 현재까지 중진공 임원, 최경환 의원 보좌관 등 관련자들 조사, 디지털증거 분석,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10. 선거법 위반사건은 공소 시효가 짧으므로 신속히 수사할 것	○ 선거법위반 사건은 그 최초 발생부터 수사 및 종국 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공정하고도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사건 발생 총 3,176명, 기소 1,430명(구속 114명), 불기소 1,746명 등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6. 10. 13.을 도과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음 ○ 향후에도,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 서울중앙지검의 높은 미제율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서울중앙지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롯데그룹 비리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대형 부정부패 및 중요 경제범죄 수사로 전반적 미제율이 타청에 비해 높음 - 다만, '16년 총 미제는 '15년에 비해 10.4% 감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2. 무죄사건 감소를 위해 수사팀 외에 사건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검토팀을 두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건 처리를 독려하고 합리적인 업무배분 등으로 미제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주요 사건 및 기소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 관해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무죄선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공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차장검사) 및 수사검사 포함 10명 이내의 검사로 구성 ※ 서울고검 관내 무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무죄율(1심 1.02%, 2심 1.77%) '16년 무죄율(1심 0.88%, 2심 1.67%) ○ 향후, 무죄선고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객관적인 별도의 검토팀 설치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13. 국외 도피사범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자 해외도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전의 신속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통해 예방토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출국금지·정지자 총 4,771명 서울중앙지검 1,347명, 서울동부지검 303명, 서울남부지검 574명, 서울북부지검 434명, 서울서부지검 252명, 의정부지검 436명, 인천지검 172명, 수원지검 1,065명, 춘천지검 188명 ○ 중요 해외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외교부, 경찰청, 대검 국제자금 추적팀 등과 긴밀히 협조, 검거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1.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정부출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버스구입보조금 관련 비리,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였음 ○ 앞으로도 토착비리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비리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행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대전지검) ○ '16년 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비리 사건 등 지역토착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음 ○ 계속하여 지역토착비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청주지검) 												
	2.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에 특허 침해범죄 전담수사부 신설을 검토할 것 (대전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1.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 - 작년 대비 특허범죄 사건 수 44% 증가 <table border="1" data-bbox="865 1368 1407 1473"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기간</th> <th>대전 자체접수</th> <th>타청 사건접수</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2015</td> <td>251</td> <td>20</td> <td>271</td> </tr> <tr> <td>2016</td> <td>246</td> <td>146</td> <td>392</td> </tr> </tbody> </table> ○ 특허조사부 신설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 3명은 형사부 소속, 월 180건 이상의 일반형사 사건 배당받으면서 특허 사건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 - 특허형사 사건 특성상 당사자 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필수적이고, 특허수사지문관의 지문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기간	대전 자체접수	타청 사건접수	합계	2015	251	20	271	2016	246	146	392
기간	대전 자체접수	타청 사건접수	합계											
2015	251	20	271											
2016	246	146	39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특허범죄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전문 수사력 강화, 신속·집중적인 수사를 통한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조사부 및 특허조사과 신설 필요함 ○ 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17년 소요정원 및 '16년 수시직제로 특허조사부 및 특허조사과 신설을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직제 반영을 위해 행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3.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 이후인 '16년 11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고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대전고검) ○ 대전지검은 '15. 4. 검찰시민위원회를 대폭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명·위원 40명, 4개 소위원회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교직자, 연구원, 기업인, 의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가, 종교계 인사 등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 - 매월 4회(1회 평균 2건 심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검찰시민위원회 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 수상 ○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심의 후 당사자간 합의, 별건 구속 등)이 없는 한 시민위원회 심의결과와 동일하게 처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p>- '10. 7. ~'16. 8. 검찰시민위원회 184건의 안건 심의결과, 7건을 제외하고 심의결과와 동일 처분</p> <p>○ 향후에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대전지검)</p> <p>○ '16년 검찰시민위원회를 18회 개최하여 총 28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p> <p>○ 원칙적으로 월 2회 정례 개최하여 보다 많은 사건에 대하여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음(청주지검)</p>
	4. 갑을오토텍 노조과피 행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할 것 (천안지청)	<p>○ 기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철저히 공소유지 하여 유죄 확정 되었음</p> <p>※ '16. 11. 대표이사 박호상 징역 10월 확정(대전지법)</p> <p>○ 사측의 불법직장폐쇄, 불법대체 생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청 수사 중으로, 신속히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하겠음</p>
	5. 유성기업 고소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 (천안지청)	<p>○ 검찰 수사 중 금속노조에서 재정 신청을 하여 현재 법원 심리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음</p> <p>※ '16. 9. 금속노조, 재정신청(대전고법)</p>
	6. 아이카이스트 및 아이 팩토리에 대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할 것 (대전지검)	<p>○ 아이카이스트 대표(아이팩토리에 기술 투자)를 '16. 10. 18. 170억원 상당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 30. 45억원 상당의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였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최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 고소 등으로 추가 피해자가 확인 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7. 검사 직접 청구 영장 기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검의 검사 직접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은 '14년 26.1%, '15년 21.3%, '16년 26.9%로 '16년에 다소 상승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전국 평균 검사 직접청구 영장 기각률 23.4% ○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 의한 것이나, 향후 더욱 신중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혐의사실과 구속요건에 대한 철저한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혐의사실과 구속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 법원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영장이 기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대전지검) ○ 피의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에 대해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여 국민의 범감정에 부합하게 처리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지검 2016년 검사 직접청구 영장기각률은 23.7%로, 전국 평균인 23.4%와 비슷함 (청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8. 대전지검·청주지검의 높은 형사사건 무죄율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죄방지대책 수립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부 집중검토제 실시(매주 1회, 공판부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검사 주재, 무죄예상 사건 등에 관한 향후 공소유지 방안 논의 등 - 부인 사건 부장검토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구현, 공판부장이 미리 부인 사건을 선별하여 중간 점검 ○ 공판역량 강화 방안 수립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뉴스레터 발간(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무죄사례, 공소유지 우수사례 등을 취합하여 수사검사실과 공유, 피드백 강화 - 공판 브라운백 미팅 실시(월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주요 무죄사례 분석, 형사소송 실무 스터디 활용하여 학습 실시 ○ 수사검사실과 공판검사실 피드백 강화방안 수립(시행 예정, 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 법정 참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관하여 수사내용이 공판에 어떻게 현출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등을 직접 습득하게 하는 등 수사능력 강화 - 공판 진행 중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대전지검) ○ 대부분이 법원과의 견해차이에 의한 것이나, 2심 무죄선고 인원이 특정 재판부에 편중된 점도 고려 필요 ○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현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청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범죄정보 수집·수사력 강화로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있음 ※ 납품계약 비리로 前 해남군수를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김제시장, 광주시 정책지문관, 비서관, 전남·전북의회 의원 등 지자체 주요 공직자를 직무 관련 비리로 엄단하였음 ○ 특히, 이권부서 공직자,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2.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법정주의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을 재검토할 것	○ 형평성 문제가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대검과 신중히 검토하겠음
	3. 스폰서검사 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과격적이고 혁신적인 인사 정책을 마련할 것	○ 법무부, 대검과 신중히 검토하겠음
	4. 피의자와 변호인이 작성되는 조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듀얼모니터 설치를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모니터 설치로 인한 장점 뿐 아니라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 또한,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
	5.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임 ○ 산하 지검은 대부분 시민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그 심의결과를 처분에 적극 반영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고검도 적극 활용을 지도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6. 국가보안법 미제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검은 2016년 수사 중이던 3건 모두 처리함 ○ 광주지검은 2016년 수사 중이던 3건 중 2건 처리함 ○ 전주지검은 현재 4건 수사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음
	7.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결정 과정에서 검찰이 항고이유서에 첨부한 개를 이용한 감정서의 적합성 여부와 동물보호법상 절차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군산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서 제출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지청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요청함 - 감정방법 및 동물실험은 해당 법의학자가 검찰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군산지청은 감정의견 중 일부 내용이 살인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감정서를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출함 ○ 동물보호법위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해당 법의학자는 동물실험 당시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식용으로 이미 죽은 개를 이용해 실험하였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명하여 동물보호법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지청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등을 고려하여 광주고법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무죄 선고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진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 기소하였음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서면질의에 대하여 이미 보고한 바 있음
	8. 검사 직접 청구 영장 기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주지검의 '16년 검사 직접 청구 구속 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 및 사경신청 기각률 보다 낮아 양호하고, 제주지검은 전년 36.1%에 비하여 '16년 영장기각률이 7.7%로 매우 양호함 ○ 검사 직접 청구 사건은 뇌물, 재산범죄 등 주거가 일정한 반면 사안이 중대하고 다툼이 많은 사건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사경 신청 사건은 강력사건 등 사건의 성질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검사가 영장발부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 기각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충실한 수사와 신중한 영장 청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등으로 기각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음
	9.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많은 사회적 문제와 우려를 야기하므로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외국례를 참고하여 범죄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지검)	○ 외국인범죄 문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 중임 - 외국인 범죄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 · 외사 전담 검사 추가 지정 ·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적극 활용 · 적극적인 출국정지 · 중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 - 2017. 1. 제주지검 주최 '출입국 및 외국인범죄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 개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2017. 2.부터 유관기관 합동 계도 및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등 외국인범죄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대구고검 대구지검	1. 대구광역시립 희망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할 것 2.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학교급식 관련 사건을 강력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	○ 대구지검은 '16. 10.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대구광역시립 희망원 관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였음 ○ 생활인 감금 등 가혹행위 의혹, 생활인 사망 의혹, 희망원의 자금운용 비리 등을 집중수사하여, '17. 2.까지 희망원 前·現 직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음 ○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500여개 학교에 축산물 부위를 속여 납품한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자 등 17명을 학교급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단속·인지하여 '16. 9. 전원 기소한 바 있음 ○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정·불량식품사범을 적극적으로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임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	○ 법조비리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법조브로커 등 중대위반사범을 구속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음 ○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조비리 전용신고 번호와 설문함을 설치하는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부산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9.부터 대검 지시에 따라 변호사의 구두변론 현황을 관리대장에 기재하는 업무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음 ○ 2016. 1.~12.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검찰수사관 1명 구속 등 법조비리사범 23명(8명 구속)을 인지하여 엄단함 ○ 향후에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비리사범 단속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울산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9. 19. 시행된 대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2016. 10. 검사 회의를 통하여 전 검사가 철저히 숙지하고 엄정 준수하도록 조치함 - 위 지침에 따라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금지하고, 선임사실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있음 ○ 검사 및 직원들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처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2016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8개 지검 중 1위를 달성함 ○ 앞으로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법조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음 (창원지검)
	2.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심야조사를 줄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양하여 불필요한 심야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야조사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부산지검) ○ '16년사건관계인 21명에 대하여 심야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중 18명은 강도상해 구속사건 피의자로 구속기간 내 혐의 입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심야조사 실시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조사는 지양하고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제를 철저히 준수하겠음 (울산지검) ○ '16년 창원지검의 심야조사 건수는 총 12건이며 모두 특수부에서 실시된 것으로 특수부의 인지수사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조사량이 방대하여 부득이하게 심야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 다만 위 심야조사 사안은 모두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고 인권보호관인 차장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심야조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음(창원지검)
	3. 형사부 검사 인력 확충 등 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청은 형사부 검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지부서 인원 1명을 감축하여 형사부에 배치하고, 국외훈련, 육아휴직 등으로부터 복귀하는 검사 11명 중 10명을 인지부서가 아닌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하였음(2016. 7.~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 부부장검사 이하 전체 실근무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형사부 실근무 인원 비율은 증가</p> <table border="1" data-bbox="858 387 1415 624">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실근무 인원</th> <th rowspan="2">형사부 실근무 비율</th> </tr> <tr> <th>계</th> <th>형사 (공판)</th> <th>인지 부서</th> </tr> </thead> <tbody> <tr> <td>2016. 1.말</td> <td>56</td> <td>41</td> <td>15</td> <td>73.2%</td> </tr> <tr> <td>2017. 1.말</td> <td>55</td> <td>41</td> <td>14</td> <td>74.5%</td> </tr> <tr> <td>증감</td> <td>-1</td> <td>0</td> <td>-1</td> <td>+1.3</td> </tr> </tbody> </table> <p>○ 앞으로도 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형사부 검사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부산지검)</p> <p>○ 2016. 상반기 검사 인사 시 부부장 검사 2명 모두 형사부 배치 등 형사부 인력 보강</p> <p>○ 2016. 7. 인지부서에 형사사건을 일부 배당하고, 2016. 8. 검사직무대리 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형사부 검사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울산지검)</p> <p>○ 2016. 6.부터 공안부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전속 배당하고, 특수부에 지방경찰청 송치사건 중 중요사건을 배당하는 등 형사부 업무 경감 조치를 시행함</p> <p>○ 2015. 2.부터 공안부 검사를 3명(기존 4명) 배치하고, 2016. 11.부터 특수부 검사를 3명(기존 4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p> <p>○ 2016. 하반기 유학 및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검사들을 모두 형사부 및 공판송무부에 배치하는 등 형사부 인력확충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함(창원지검)</p>	구분	실근무 인원			형사부 실근무 비율	계	형사 (공판)	인지 부서	2016. 1.말	56	41	15	73.2%	2017. 1.말	55	41	14	74.5%	증감	-1	0	-1	+1.3
구분	실근무 인원			형사부 실근무 비율																					
	계	형사 (공판)	인지 부서																						
2016. 1.말	56	41	15	73.2%																					
2017. 1.말	55	41	14	74.5%																					
증감	-1	0	-1	+1.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4. 재소자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재소자 면담 실시로 교정기관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사가 직접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 중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하겠음 (부산지검) ○ '16. 6. 검사장이 울산구치소에서 「찾아가는 법무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재소자 관리실태 등 교정업무 현장 점검 실시 ○ 반기별로 구치소 수용 피의자 상대로 인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 여부와 불편한 사항을 청취하고 있음(울산지검) <p style="margin-left: 20px;">※ '16. 하반기 수용 피의자 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폭언 등 인권침해 사례 전무</p>
	5. 국외출국에 따른 기소 중지자가 늘어나고 있음. 적극적인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인을 추적·검거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도피 경제사범 등 국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강화하여 사전에 해외 도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 인터폴 수배, 여권효력상실 조치를 통한 강제귀국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검거율을 더욱 높여 나가겠음(부산지검) ○ 국외출국 기소중지자는 2017. 2. 현재 기준 57명임(여권 반납 및 무효화 조치의뢰 2명) ○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국외도피사범 검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울산지검)</p> <p>○ 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여권무효화 조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음</p> <p>○ 국외도피사범에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하여 만연히 기소중지 처분하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창원지검)</p>
	6.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 (부산지검)	<p>○ 부산동부지청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16. 10. 21. 부산지검으로 이송 후, 수사팀을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p> <p>- 현재까지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 총 12명을 기소(11명 구속기소) 하였음</p>
	7.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p>○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전담 수사관 2명을 배치하는 등 지능화된 마약사범의 엄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부산지검)</p> <p>○ 해외 밀수 마약사범 엄단 및 필로폰 대량 압수 등 마약사범 척결 노력</p> <p>- 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산 차(茶) 등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하여 필로폰 약 1.02kg 밀수 사범 검거·구속, 필로폰 전량 압수('16. 9.)</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kg을 밀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검거·구속, 필로폰 약 4kg 압수('16. 11.) ○ '16. 4.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발족 이래 '16. 12.까지 효율적인 검·경 수사력을 응집하여 마약사범 총 248명 (64명 구속)을 인지하는 등 엄단하였음 (울산지검) ○ '16. 6.~10. 김해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태국산 마약 '야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집중단속 실시, 시가 약 6,000만원 상당의 야바 800정을 밀수한 불법채류자 등 태국인 9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기소하고 야바 400정을 압수하였음 ○ '16년 마약사범 총 28명을 인지하여 18명을 직구속하였음 ○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하여 적극 수사하여 엄벌하도록 하겠음(창원지검)
	8.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부산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부산신항 일대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집회를 주최하면서 화물연대 간부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에게 시너를 뿌리고 라이트로 위협한 화물연대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불법행위자 83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현재 불구속 수사 중임 ○ 집단운송거부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과격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주도세력을 엄단하는 등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9. 지역토착 비리 사건의 발본색원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김해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구속기소하여 '17. 1. 13.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음 ○ 앞으로도 고질적인 지역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부산지검)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12. 관내 교량공사 관련, 특정 교량공법 및 자재사용 등을 강요하여 직권을 남용한 前 울산시 4급 공무원 등 6명 인지(4명 구속), 지역주택조합자금을 횡령한 조합장 등 9명 인지(4명 구속) ○ '17. 1. 대출 등 업무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신희 임직원 등 3명 구속 (관련자 계속 수사 중) ○ 향후에도 지역토착비리에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울산지검)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7. 창녕군의회 의장단 선출 대가로 군의원 1명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창녕군의회 의장, 부의장을 인지하여 구속하였음 ○ '16. 7. 지하수 조사 업무를 직영 수행한 것처럼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여 발주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합계 11억 원을 편취한 농어촌 공사 간부 7명을 인지하고, 4명을 직구속하였음 ○ '16. 6.~10.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약 2억 원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보조금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 등 총 39명을 인지하여 국립대 교수 등 4명을 구속하고 35명 불구속 기소 하였으며 보조금 9,20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음</p> <p>○ 앞으로도 지역토착비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음 (창원지검)</p>
	<p>10.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학교급식 관련 사건을 강력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p>	<p>○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한 입찰비리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하였음</p> <p>※ 구속기소 3명 포함 총 18명 기소</p> <p>○ 국정감사 이후 학교급식업체에 대해 특사경 4개 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음 (부산지검)</p> <p>- '16. 10. 25. 부산시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18개소 대상 단속 실시</p> <p>※ 유통기한 경과·허위표시 사범 2개 업체 입건, 1개 업체 행정처분 지휘</p> <p>○ 아동·청소년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끼치는 학교급식 관련 비리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음</p> <p>- '16.9. 쇠고기 등급을 속여 울산지역 55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사건을 부장검사 주임검사 사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등 학교급식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울산지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1.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의 최측근 등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과 관련 홍준표 도지사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위조사건을 조사하여 경남 FC 대표, 경남개발공사사장을 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구공판(3명 구속)하고, 18명을 구약식 처분하여 전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 홍준표 도지사의 관련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본건은 경남 FC 대표 및 경남개발공사사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홍 지사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